

# 2024

##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



# CONTENTS

## 1.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질문 1. 학교가 사안처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15
질문 2. 심의위원회 개최 기한이 있나요?	15
질문 3. 조치결정 통보 후 학교가 해야 할 일은?	15
질문 4. 상담 중 학교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16
질문 5.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16
질문 6. 피해학생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16
질문 7. 우발적인 싸움의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17
질문 8. 양측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17
질문 9.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17
질문 10.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에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18
질문 11.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19
질문 12. 가해자가 유예생인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19
질문 13. 가해자가 자퇴생, 퇴학생인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20
질문 14. 사안 발생 당시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피해학생이 자퇴·졸업한 경우에도 사안처리가 가능한가요?	20
질문 15. 가해학생이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20
질문 16.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21
질문 17. 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21
질문 18.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사안을 인지 시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21
질문 19. 학교폭력 사안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22
질문 20.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할 수 있나요?	22
질문 21. 관계회복·화해중재가 성립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22

## 2.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조사

질문 22. 전담기구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26
질문 23. 전담기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26

질문 24. 전담기구는 누구로 구성하나요?	26
질문 25. 전담기구 구성원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나요?	27
질문 26.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의 위촉방법은?	27
질문 27. 전담기구 구성원인 학부모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27
질문 28. 전담기구에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포함시킬 수 있나요?	27
질문 29. 전담기구 구성원으로부터 비밀서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28
질문 30. 전담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28
질문 31. 전담기구 구성원의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28
질문 32. 전담기구의 심의방법은?	28
질문 33. 수사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29
질문 34.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수업시간에 해도 되나요?	30
질문 35. 사이버폭력이나 성폭력 사안의 경우 유의할 점이 있나요?	30
질문 36. 피·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유의할 점이 있나요?	30
질문 37. 피·가해학생이 다문화·탈북학생인 경우 유의할 점이 있나요?	31

### 3.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질문 38.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는?	35
질문 39. '분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35
질문 40. 분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6
질문 41. 피해학생에게 분리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36
질문 42. 분리의 '예외'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37
질문 43. 학교폭력예방법 상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는?	37
질문 44.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은?	38
질문 45. 분리기간의 출석처리는?	38
질문 46. 분리의 '종료'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38
질문 47. 학년·학급이 다른 경우에도 분리가 의무인가요?	39
질문 48. 쌍방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경우에도 분리해야 하나요?	39
질문 49.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분리해야 하나요?	39
질문 50.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에도 분리해야 하나요?	39
질문 51. 가해학생이 분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
질문 52. 분리된 가해학생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
질문 53.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피해학생이 분리를 요청한 경우 가해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분리해야 하나요?	40

#### 4. 파·가해학생 긴급조치

질문 54.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하는 경우, 내부결재가 필요한가요?	44
질문 55. 학교장의 피해학생 긴급조치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44
질문 56.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 (6호)에는 무엇이 있나요?	44
질문 57. 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긴급조치를 한 경우, 사후 절차는?	44
질문 58.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45
질문 59. 가해학생 긴급조치를 동시에 부과(병과)할 수 있나요?	45
질문 60.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조치(2호)를 하면서,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교실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46
질문 61. 학교장의 긴급조치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3호)의 이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46
질문 62. 학교장의 긴급조치인 특별교육 이수조치(5호)에 따른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46
질문 63.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6호) 또는 학급교체 조치(7호)를 하려는 경우의 사전 절차는?	47
질문 64. 학교장 우선 출석정지 조치(6호)는 등교를 못하게 하는 건가요?	47
질문 65.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를 한 경우, 사후 절차는?	47
질문 66. 학교장 긴급조치 사후 절차에서의 ‘즉시’란 ?	48
질문 67.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한 경우에도 긴급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8
질문 68. 긴급조치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에게 책임이 발생하나요?	48
질문 69. 가해학생이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48
질문 70. 가해학생에게 한 긴급조치도 조치결정 통보서에 기재되나요?	49
질문 71. 가해학생에게 한 긴급조치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49
질문 72. 학교장 긴급조치 후에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경우에는?	49

#### 5. 학교장 자체해결제

질문 73. 성폭력 사안도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53
질문 74. 학교폭력 의심사안을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로 끝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나요?	53
질문 75.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1호.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란?	53
질문 76.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53
질문 77.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2호.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란?	54
질문 78.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3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란?	54

질문 79.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란?	54
질문 80.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대한 전담기구 심의는 필수인가요?	54
질문 81. 학교폭력 관련학생의 소속교가 다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시 가해학생 소속교에서도 전담기구 심의를 해야 하나요?	55
질문 82.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55
질문 83. 가해학생이 여러 명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일부 학생에 대하여만 자체해결로 처리할 수 있나요?	55
질문 84.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도 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나요?	56
질문 85. 관계회복프로그램과 화해중재단은 언제 운영할 수 있나요?	56
질문 86.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56
질문 87.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심의위원회 개최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57
질문 88.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7

## 6. 심의(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질문 89.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62
질문 90.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나요?	62
질문 91. 심의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62
질문 92. 사임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63
질문 93. 심의위원을 추가적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나요?	63
질문 94. 심의위원 연임(중임)이 가능한가요?	63
질문 95. 심의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나요?	63
질문 96. 심의위원인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할 수 있나요?	64
질문 97. 어떤 경우에 심의위원 해임/해촉이 가능한가요?	64
질문 98. 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누가 임명/위촉하나요?	64
질문 99.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의결 정족수는?	65
질문 100. 소위원회란?	65
질문 101. 소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누가 지명하나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65
질문 102.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66
질문 103. 심의(소)위원회에서 사안을 병합·분리할 수 있나요?	66
질문 104.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청취는 의무인가요?	66
질문 105.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청취가 의무인 경우는?	66
질문 106. 전문가 의견청취 제도의 운영 절차는?	67

질문 107.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에는 누가 있나요?	69
질문 108.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경우, 전문상담(교)사로부터 의견청취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69
질문 109.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은?	69
질문 110. 전문가 의견청취 시 관련 수당의 지급은 가능한가요?	70
질문 111. 심의위원회 당일까지 전문가 의견청취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는?	70
질문 112. 소위원회 심의·의결 후 처리절차는?	70
질문 113. 소위원회를 추가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70
질문 114. 공동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 구성이 되나요?	71
질문 115. 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71
질문 116. 공동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은?	72
질문 117. 관련학생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처리는?	72

## 7.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질문 118. 제척, 기피, 회피란 무엇인가요?	75
질문 119. 제척이 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75
질문 120. 기피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75
질문 121.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76
질문 122. 제척, 기피, 회피 해당자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진행이 가능한가요?	76
질문 123. 어떤 경우에 회피를 해야 하나요?	76

## 8. 심의위원회의 비공개, 정보공개 / P.

질문 124. 교육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나요?	79
질문 125. 변호사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나요?	79
질문 126. 변호사가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도 있나요?	79
질문 127. 교원이나 전문가를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나요?	80
질문 128. 비밀누설금지 의무란 무엇인가요?	80
질문 129.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비밀누설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80
질문 130. 관련학생들 및 그 보호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부여되나요?	81
질문 131. 심의위원회 속기록, 녹음기록, 녹취록을 생산·보존할 의무가 있나요?	81
질문 132.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생산·보존할 의무가 있나요?	81

질문 133.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방법은?	82
질문 134.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범위는?	82
질문 135.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82
질문 136. 공개가 가능한 정보, 불가능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83
질문 137. 현장이 찍힌 CCTV영상을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공개할 수 있나요?	83
질문 138.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83
질문 139. 전담기구 구성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나요?	84
질문 140.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나요?	84
질문 141.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야 하나요?	84
질문 142.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가 의무인가요?	85
질문 143.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사본, 전자적 형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85
질문 144.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정보공개 청구를 관련학생의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85
질문 145.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의 불복 구제 절차는?	86
질문 146. 수사기관에서 자료제출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이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86

## 9. 피해학생 보호조치

질문 147.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반드시 내려야 하나요?	89
질문 148.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동시에 부과(병과)할 수 있나요?	89
질문 149. 피해학생 보호자가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89
질문 150. 보호조치로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내릴 수 있나요?	89
질문 151. 피해학생의 결석에 대한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90
질문 152.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가능한가요?	90
질문 153. 피해학생의 심리상담비용이나 치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90
질문 154.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모두 지원해주나요?	91

## 10. 가해학생 선도조치

질문 155.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 가해학생 선도조치는 반드시 내려야 하나요?	95
질문 156.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동시에 부과(병과)할 수 있나요?	95
질문 157. (기본·부가적) 판단요소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95
질문 158. 가해학생 조치를 내릴 때 기간의 단위는?	96
질문 159. '조치이행기간'을 정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96



질문 160.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만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96
질문 161. 제1호(서면사과) 조치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96
질문 162.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조치에서 '접촉금지'의 범위는?	97
질문 163.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조치는 언제 이행하나요?	97
질문 164. 제5호(특별교육이수) 조치에 따른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97
질문 165. 제5호(심리치료) 조치는 어디에서 받나요?	98
질문 166.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에 따른 결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98
질문 167. 제6호(출석정지) 조치 기간의 출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98
질문 168. 제6호(출석정지) 조치 기간에 부가된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나요?	98
질문 169. 제6호(출석정지) 조치의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99
질문 170.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 상급학교 분리배정이 되나요?	99
질문 171. 제1호~제7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 상급학교 분리배정이 되나요?	99
질문 172.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00
질문 173. 가해학생 조치 미이행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00
질문 17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00
질문 175.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작성 및 발송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01
질문 176. 공동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작성 및 발송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01
질문 177.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전학을 갈 수 있나요?	101

## 11.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부가된 특별교육

질문 178.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해 부가(附加)된 특별교육이란?	105
질문 179. 제5호(특별교육이수) 조치와 제2호~제4호, 제6호~제8호 조치를 동시에 내리는 경우, 가해학생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부가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105
질문 180. 가해학생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부가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06
질문 181. 제17조제3항에 따른 부가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106
질문 182. 가해학생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106
질문 183.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06
질문 184.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이수 안내는 누가 하나요?	107
질문 185.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07
질문 186.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107
질문 187.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절차는?	108
질문 188. 심의위원회에서 부가된 특별교육을 누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08

## 1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질문 189.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및 삭제해야 하는 경우는?	111
질문 190.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법은?	112
질문 191.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3호)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12
질문 192. 기재가 유보된 조치(제1호~제3호)와 추후 새롭게 추가된 조치(제1호~제9호)를 받은 학년도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12
질문 193.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동시에 부과(병과)받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113
질문 194. 가해학생이 제1호~제3호 조치를 받고,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유보되나요?	113
질문 195.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의 관리·보유는?	113
질문 196. 가해학생이 제1호~제3호 조치를 받고,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된 후, 본인이 기각재결(판결)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되나요?	114
질문 197. 학업중단자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언제 삭제하나요?	114

## 1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질문 198. 학교폭력 불복절차의 개관은?	119
질문 199.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19
질문 200. 쌍방폭력으로 A, B학생 모두 피·가해학생 조치가 나온 경우의 불복방법은?	119
질문 20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120
질문 202. 사립학교 재학생의 경우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120
질문 203.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시 가해학생 조치의 실행이 유보되나요?	120
질문 204. 새로운 증거자료가 나온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할 수 있나요?	120
질문 205.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21
질문 206.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이 나온 경우,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21
질문 207. 가해학생이 본인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한 경우,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22
질문 208. 가해학생이 본인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알려야 하나요?	122
질문 209. 행정심판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123
질문 210. 행정소송 집행정지 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125
질문 211. 행정소송 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126

질문 212. 행정심판(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 해야 할 일은?	127
질문 213.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127
질문 214. 행정심판(소송)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취소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127
질문 215. 가해학생이 본인 조치(원조치)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원조치가 변경된 경우, 이미 원조치 결정을 이행하였더라도 변경된 조치 결정을 다시 이행해야 하나요?	128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관계회복 위주의 교육적 해결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향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학교는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당사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

2024

#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



A decorative grid of 24 small, light-colored dots arranged in 8 rows and 3 column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01

---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 1

##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 관련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0조(학교폭력 신고의무)**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문  
1**학교가 사안처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학교는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초일 불산입, 공휴일·토요일 산입) 이내에 ①사안조사 ②전담기구 심의 ③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④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질문  
2**심의위원회 개최 기한이 있나요?**

교육지원청은 학교로부터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21일(초일 불산입, 공휴일·토요일 산입)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7일 이내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3**조치결정 통보 후 학교가 해야 할 일은?**

1.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즉시 기재
2.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및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기재·관리
3. 피·가해학생 조치 이행하게 함(피해학생 조치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
4.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부가된 특별교육 이행하게 함
5.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이행할 경우,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에게 보고

질문  
4**상담 중 학교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교원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 중 학교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 접수를 하고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처리되지 않는 한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질문  
5**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전담기구의 심의결과 보고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사안조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학교장 내부결재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질문  
6**피해학생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상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가 가능하고, 피해학생 측이 신고한 사안에서 스스로 오인신고였음을 인정하고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이후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으로 종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7**우발적인 싸움의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심의위원회에서 쌍방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두 학생 모두에게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내립니다. 더 많이 때렸거나 먼저 때린 사람만 가해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8**양측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양측의 화해정도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심의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  
9**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성폭력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안을 인지하게 되면 신고 접수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전담기구 심의시 관련 서류를 비실명으로 처리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함. 피해학생 측이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피해학생 측에게 신고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한 후 신고를 해야 함. 다만 수사기관에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함

질문  
10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에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포함)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4조제2항)

※ 「2024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참고



질문  
11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학생이 아닌 가해자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내릴 수는 없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해학생 측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추가적인 보호지원(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선지급, 출석일수 산입, 시험 등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에 대하여 설명한 후, 미개최 동의서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함

구분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해의 주체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	보호자(친권자, 교사 등)	제한 없음
가해의 객체	아동(18세 미만)	아동(18세 미만)	학생

질문  
12

## 가해자가 유예생인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유예생은 학생 신분을 유지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가능합니다. 당해학년도의 경우 학적반영 취소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전학년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 후 해당 조치사항을 정정합니다.

-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질문  
13**가해자가 자퇴생, 퇴학생인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퇴를 하거나 퇴학 처리가 된 학생은 더 이상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 받는 학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이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해학생 측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추가적인 보호지원(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선지급, 출석일수 산입, 시험 등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에 대하여 설명한 후, 미개최 동의서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 피해자가 사안 발생 당시 자퇴생, 퇴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질문  
14**사안 발생 당시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피해학생이 자퇴·졸업한 경우에도 사안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안처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행위이므로, 사안 발생 당시 피해자가 학생(유예생 포함)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할 시 자퇴·졸업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면, 보호조치는 할 수 없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만 가능합니다. 가해자 역시 자퇴·졸업 등의 이유로 학생이 아니라면, 선도조치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안처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15**가해학생이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동심의위원회는 선택사항이므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징계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동심의위원회 개최가 바람직합니다.

질문  
16**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과는 달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해야 합니다.

질문  
17**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처분과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법적인 근거와 그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와는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질문  
18**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사안을 인지 시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현재 학적을 둔 학교에서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졸업을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상 사안처리의 시효(時效)가 없으므로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졸업한 학교에서 사안처리(학교장 자체해결 포함)를 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19**학교폭력 사안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한 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없음

질문  
20**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할 수 있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입원 등으로 관련학생의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기간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유보된 사실과 유보된 사유를 관련학생 보호자에게는 서면, 학교에는 공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는 유보기간에 피해학생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유보기간이어도 부동의 사건에 한하여(학교장 자체해결의 4가지 요건은 충족해야 함)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가 가능하므로 관계회복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장의 긴급 보호조치 가능

질문  
21**관계회복·화해중재가 성립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관계회복·화해중재가 성립되어도 심의위원회는 개최되어야 합니다. 즉, 관계회복과 화해중재를 학교폭력 사안처리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심의 시 화해정도 등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관계회복·화해중재가 되었다는 이유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는 불가능함

A decorative grid of 24 small, light-colored dots arranged in 8 rows and 3 column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02

---

##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조사

## 2

##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조사

##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⑤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 3의3.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에 관한 사항
- ②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활용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질문  
22**전담기구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수립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의 업무분장, 심의방법, 학부모 구성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23**전담기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인지 후 48시간 이내)
- 초기사실 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심의 X)
- 학교장 긴급조치 여부 심의
-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심의
-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관리
-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관리
-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질문  
24**전담기구는 누구로 구성하나요?**

학교의 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합니다.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사, 보건업무 담당교사 등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성원 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다만,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  
25

## 전담기구 구성원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다만, 전담기구 총괄, 사실확인, 상담, 보건 등의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을 참여시켜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  
26

##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의 위촉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합니다.

추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를 추천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진행 및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핸드북'을 참고바람

질문  
27

## 전담기구 구성원인 학부모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  
28

## 전담기구에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포함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의 구성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포함한 외부인은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질문  
29

## 전담기구 구성원으로부터 비밀서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필요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전담기구 구성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30

## 전담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다만, 전담기구를 매 학년 초에 구성하고 있는바 구성원(학부모 포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임·중임이 가능합니다.

질문  
31

## 전담기구 구성원의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담기구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시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또한, '전담기구 구성 변경'에 대한 내부결재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질문  
32

## 전담기구의 심의방법은?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의·의결요건을 준용하여 전담기구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 구성원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33

### 수사기관의 조사와 별개로 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안처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동법 제11조의3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은 아래 서식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정보공유 서식

대상학생	성명	최OO	생년월일	0000.00.00.	학교명	경기도 000고등학교
사건 개요	* <예시> 최OO은 '24.00.00. 00:00경 경기도 00시 소재 00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OO을 폭행한 것임.					
수사 진행사항 (해당항목에 “○”표기)	수사 중	불송치	검찰청 송치	소년부 송치	기 타	
			○			
			OO지검 (00.00.)	OO가정법 원 (00.00)	※ 기타로 표기 시 관련사항 간략 기재	
비 고	<p>* 필요 시 선도프로그램, 전문가참여제 등 진행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등 기재 ※ &lt;예시&gt; OO경찰서에서 선도프로그램 이수(00.00.~00.)</p> <p>* 수사 진행사항별(‘수사 중’, ‘검찰청 송치’, ‘소년부 송치’)로 특별히 기술 가능한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p>					

질문  
34**조사관의 사안조사를 수업시간에 해도 되나요?**

학습권(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때 해당 학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35**사이버폭력이나 성폭력 사안의 경우 유의할 점이 있나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학교장은 긴급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담기구는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학생 대상의 성폭력인 경우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피·가해학생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학교장 긴급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담기구 심의시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이름 등을 비실명처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질문  
36**피·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유의할 점이 있나요?**

조사관 조사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의사전달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특수교사 등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진술을 조력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후 조사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관 조사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도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가능(법 제16조의2제2항)

질문  
37

### 피·가해학생이 다문화·탈북학생인 경우 유의할 점이 있나요?

상황에 대한 이해나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진술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상황 전달과 자기표현을 위해 통역을 활용하거나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켜 충분한 통·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조사관 조사 및 심의위원회에 다문화 예비학교 담당자, 탈북교육담당자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2024

#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





A decorative grid of 24 small, light orange dots arranged in 8 rows and 3 column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03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 3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 관련법령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질문  
38

##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는?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자(교사 포함)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학교는 분리를 시행하기 전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분리방법 결정일로부터 최대 7일), 출결(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출석인정 결석), 분리 종료 사유, 이후의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은 피해(관련, 추정)학생을 의미

질문  
39

## ‘분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학교 내의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가해학생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 (We센터) 등을 이용하여 분리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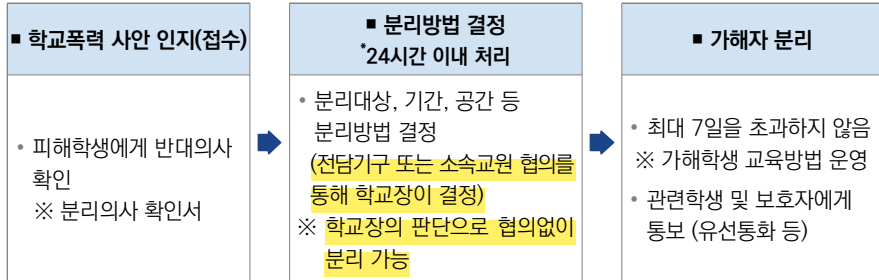
학급, 학년이 다를 경우에도 분리의사를 확인하며, 분리를 원하는 경우 수업은 각자 소속 학급에서 수강하되, 수업 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이동 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및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질문  
40

## 분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학교폭력사건의 인지(신고·접수)
2. 신고접수대장 기재
3. 피해학생에게 분리의사 확인(분리의사 확인서)
  -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분리의사 확인
4. (분리를 희망하는 경우)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분리방법\* 결정(내부 결재)
  - \* 분리대상, 분리기간, 분리공간, 분리시 가해학생 교육지원 방법 등
5. (시행령 제17조의2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해학생 분리
  - 분리방법 결정일로부터 최대 7일 가능
6.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질문  
41

## 피해학생에게 분리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1.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분리의사 확인
2. 동일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분리의사 확인
  - ※ 1. 및 2.라 하더라도, ①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②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의사를 확인할 필요 없음
3. 피해학생이 가해자 분리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 이상 가해자를 최대 7일의 범위 내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원격수업의 경우에 쌍방향이 아닌 단방향 원격수업의 경우에는 분리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합니다\*.

\* 질문 49참고

질문  
42

## 분리의 '예외'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①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분리의사 확인서 작성), ②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③가해학생에게 긴급 선도조치(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입니다.

이때, 최초에 피해학생이 분리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분리 가능 기간인 7일 이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분리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분리 반대의사 철회)에는 분리 가능 기간 잔여 일에 대해 분리가 가능합니다.

ex. 월요일에 인지하여, 분리하지 않았으나 금요일에 분리의사를 표명하면, 금요일·토요일·일요일 분리 가능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따름

질문  
43

## 학교폭력예방법 상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는?

분리 예외사유에 있어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에 따르면,

1.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2.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1. 및 2.와 관련된 활동

- 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②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③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④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⑥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질문  
44

##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은?

학교장은 최대 7일의 범위 내(1일~7일)에서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분리기간은 분리방법을 결정한 당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분리방법을 결정한 시점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토요일·공휴일 포함)에는 교육활동 시작일로부터 7일을 기산합니다.

ex. 분리기간을 4일로 결정시,

화요일 점심시간에 결정(목요일이 공휴일): 화, 수, 목, 금

금요일 교육활동 종료 후 결정: 월, 화, 수, 목

토요일에 결정: 월, 화, 수, 목

질문  
45

## 분리기간의 출석처리는?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Wee 센터 등)를 이용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46

## 분리의 '종료'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피해학생이 분리를 희망하여 분리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①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제16조제1항 긴급 보호조치 제2호(일시보호)를 하거나 ②제17조 제5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제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및 제17조제6항에 따른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가 시행되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분리는 종료됩니다.

다만, 2021. 6. 23.부터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는 학교장 직권으로는 내릴 수 없고 피해학생 측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47**학년·학급이 다른 경우에도 분리가 의무인가요?**

의무입니다.

관련학생이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학년·학급이 다른 경우라도 학교장의 분리가 의무입니다. 물론 피해학생이 분리에 반대의를 표명한 경우 등 분리 조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다만, 분리를 원하는 경우 수업은 각자 소속 학급에서 수강하되, 수업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 점심 시간, 교실 이동 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및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  
48**쌍방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경우에도 분리해야 하나요?**

관련학생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여 쌍방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학생 쌍방이 모두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49**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분리해야 하나요?**

쌍방향 원격수업이라면 분리해야 합니다.

가해자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피해학생이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등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콘텐츠 활용 중심·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과 같이 온라인 공간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방향 원격수업에서는 분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50**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에도 분리해야 하나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로 분리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합니다. 단, 분리 결정 일수보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적을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분리를 시행합니다.

질문  
51**가해학생이 분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분리보호 제도의 취지와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그 이행을 독려합니다. 다만, 충분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불응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긴급 선도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52**분리된 가해학생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장은 분리기간이라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는 피해학생과의 접촉·대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과학습(지필·수행) 평가 계획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53**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피해학생이 분리를 요청한 경우  
가해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분리해야 하나요?**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 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전담기구에서 분리기간과 방법(학급 내 자리 배치 변경, 동선 분리, 생활지도 계획 수립 등)을 결정하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과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A decorative grid of 24 small, light-brown dots arranged in 8 rows and 3 column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04

---

**피·가해학생  
긴급조치**

## 4

## 피·가해학생 긴급조치

## 관련법령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출석정지 등)

- ①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54**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하는 경우, 내부결재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긴급조치는 학교장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선도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내부결재(구두보고 후 사후결재 포함)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내부결재 시 반드시 '긴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질문  
55**학교장의 피해학생 긴급조치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개정에 따라 2021. 6. 23.부터 학교장 직권에 따른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는 폐지되었습니다. 학교장의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는 피해학생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  
56**‘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 (6호)에는 무엇이 있나요?**

학교장은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이므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출석정지 조치나 학급교체 조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57**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긴급조치를 한 경우, 사후 절차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긴급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고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58**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제17조제4항 긴급조치 :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제17조제5항 긴급조치 :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서면사과), 제3호(학교봉사), 제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제6항 긴급조치 :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출석정지) 또는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제17조제5항 및 제6항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59**가해학생 긴급조치를 동시에 부과(병과)할 수 있나요?**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제3호(학교봉사), 제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사안 발생, 심의위원회 개최 연기,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유보 등으로 인해 학교장이 추가적인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음

질문  
60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조치(2호)를 하면서,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교실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제2호 조치는 가해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시켜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학생과 같은 학급에 있는 가해학생을 교실에서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를 외부기관에서 받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  
61

**학교장의 긴급조치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3호)의 이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가해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위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교내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질문  
62

**학교장의 긴급조치인 특별교육 이수조치(5호)에 따른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장은 특별교육이수와 관련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외부기간은 1년 단위로 지정되므로, 매해 지정기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질문  
63**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6호) 또는 학급교체 조치(7호)를 하려는 경우의 사전 절차는?**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가해학생 측의 의견을 들은 후 '긴급조치 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근거를 남겨두도록 합니다. 그러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선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64**학교장 우선 출석정지 조치(6호)는 등교를 못하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출석정지 조치는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보호 및 교육목적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가정학습을 하도록 할 수 있으나, 교실 이외의 별도의 공간에서 Wee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므로, 학교장은 출석정지의 구체적 날짜를 정함에 있어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65**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를 한 경우, 사후 절차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인(追認)이란 학교장 긴급조치에 대한 사후 인정(동의)을 받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장 긴급조치에 대하여 전부추인,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추인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66**학교장 긴급조치 사후 절차에서의 ‘즉시’란 ?**

가능한 한 빠른 시일을 의미합니다.

학교는 신속하게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를 마무리한 후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때 ‘긴급조치 보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긴급조치 보고를 위한 별도의 공문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67**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한 경우에도 긴급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의결을 한 이상,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추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68**긴급조치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에게 책임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학교장 긴급조치는 사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당시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에 대해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고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69**가해학생이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을 징계\*해야 합니다.

\*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처분 중 하나의 징계가 가능함



질문  
70**가해학생에게 한 긴급조치도 조치결정 통보서에 기재되나요?**

네, 추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므로 조치결정 통보서에 기재됩니다.  
가령,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5일을 내리고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추인 후 추가로 10일의 출석정지 조치를 결정하였다면, 조치결정 통보서에는 총 15일의 출석정지 조치로 기재됩니다.  
(조치결정 통보서 작성 예시)

조치 사항	가해학생	제17조제1항제6호 출석정지 조치 15일 (학교장 긴급조치 5일 추인, 심의위원회 조치 10일)
	피해학생	제16조제1항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질문  
71**가해학생에게 한 긴급조치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추인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포함하여 기재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장 긴급조치의 추인결과를 감안하여 최종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인된 긴급조치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의 최종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질문  
72**학교장 긴급조치 후에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경우에는?**

학교장은 가해학생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합니다.  
가해학생 긴급조치 후에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경우, 긴급조치를 취소하는 내부결재를 해두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한 후에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경우라면, 긴급조치로 인한 미인정결석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고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024

#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



A decorative grid of 24 small, light-brown dots arranged in 8 rows and 3 column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05

---

## 학교장 자체해결제

## 5

## 학교장 자체해결제

## 관련법령

##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질문  
73**성폭력 사안도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면 성폭력 사안도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질문  
74**학교폭력 의심사안을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로 끝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신고 접수대장 기재 후 학교장 자체해결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았다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후라도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  
75**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1호,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란?**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1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1호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발급받은 2주 이상의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한 이상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  
76**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전담기구는 진단서를 제출하려는 피해학생 측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단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가능함

질문  
77**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2호.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란?**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 측의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이를 피해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재산상 피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합니다.

※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된 경우(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포함)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질문  
78**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3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란?**

지속성 여부는 전담기구에서 피·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합니다.

다만, 신고·접수된 특정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다른 학교폭력 사안 등 심의 내용을 확대하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질문  
79**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란?**

가해학생이 이전에 조치를 받은 사안이나 현재 조사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  
80**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대한 전담기구 심의는 필수인가요?**

필수입니다.

전담기구는 사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전담기구 심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  
81**학교폭력 관련학생의 소속교가 다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시  
가해학생 소속교에서도 전담기구 심의를 해야 하나요?**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도 전담기구 심의를 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며,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결정에 따라 전담기구에서 심의하면 됩니다. 즉, 피해학생 소속 학교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시 피해학생 측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한 후,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와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가해학생 소속 학교로 송부(공문 발송)합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 소속 학교는 전담기구 심의를 한 후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질문  
82**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전담기구의 심의결과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자체해결을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자체해결로 처리될 수 없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질문  
83**가해학생이 여러 명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일부 학생에  
대하여만 자체해결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 경우에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을 기준으로 '사건' 단위로 처리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특정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조치 심의 시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정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학생별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판단함

질문  
84**학교장 자체해결 사안도 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에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을 보고합니다. 이때 추인(동의)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85**관계회복프로그램과 화해중재단은 언제 운영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안발생 인지부터 사안처리의 전 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고, 관계 회복프로그램은 한명이 중단하고 싶으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교장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학교장은 법 제13조의 2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음

※ '경기형관계회복프로그램 워크북'(경기도교육청, 2021년 발간) 활용 가능  
(경기도교육청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제2부교육감 소속 → 생활인성교육과)

'화해중재'는 사안 관련 당사자 간 갈등의 중재를 통한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관계회복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 단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단,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관계회복 및 중재를 위한 노력을 '화해중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침해,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의 화해중재를 통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문기구입니다.

질문  
86**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측이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측이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청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을 보냅니다.



질문  
87**학교장 자체해결 처리(심의위원회 개최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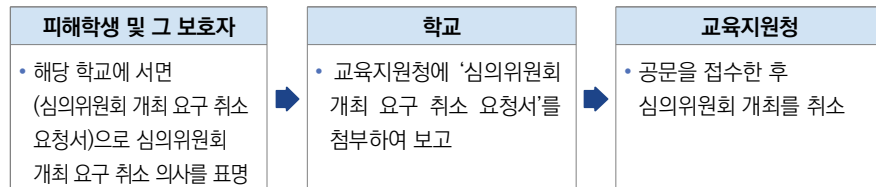
심의위원회 조치 의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 피해학생 측이 해당 학교에 서면(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의 취소 의사를 표명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88**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해당 학교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표명합니다.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보고를 하면, 교육지원청은 공문 접수 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취소합니다.

이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간주되며, 별도의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절차 및 보고는 생략됩니다.



2024

#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



A decorative grid of small dots arranged in 10 rows and 3 column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 06

---

## 심의(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6

## 심의(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관련법령

## 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이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 (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 시행령 제14조의2(소위원회)

-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질문  
89

##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기재해야 하는 내용: 심의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사안개요
  - ※ 참석 안내서의 사안개요는 사안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고,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기재
  - ※ 참석 안내서의 사안개요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안건)임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안건)을 명확히 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교육장 명의로 발송
- 심의위원 및 관련학생들 보호자에게 서면 송부
  - ※ 심의위원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도 실명처리가 원칙이나, 성폭력 등 사안의 종류와 위원에 따라 비실명 처리가 필요할 수 있음
- 공동 사안인데,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상대학생 및 보호자, 소속교(공문)에도 참석 안내서 송부 필요

질문  
90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나요?

해당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의사,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입니다.

질문  
91

## 심의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위촉일로부터 2년입니다.

교육장이 위원의 임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심의위원을 추가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임기를 단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운영규정 또는 운영계획에 근거하여야 함).

질문  
92

**사임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자격상실, 사임, 해촉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질문  
93

**심의위원을 추가적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고,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학부모'여야 합니다. (소위원회 역시 1/3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되, 심의(소)위원회의 전문성·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위원을 35% 이내로 제한함. 다만, 심의(소)위원회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5% 이내 제한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부득이하게 심의위원을 추가로 임명·위촉한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변경과 관련한 교육장 내부결재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질문  
94

**심의위원 연임(중임)이 가능한가요?**

심의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단, 2020. 3. ~ 2022. 2. 임명·위촉기간은 불포함)합니다. 중임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2년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교육장이 다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질문  
95

**심의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나요?**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은 업무가 바뀌는 경우, 학부모는 자녀가 전학, 퇴학, 졸업하여 더 이상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찰공무원은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전출한 경우에 위원자격이 상실됩니다.

질문  
96**심의위원인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할 수 있나요?**

소속된 소위원회의 학교폭력 사건은 수임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31조).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간주된다는 점, 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지득한 사항을 해당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활용하는 경우 변호사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변호사윤리장전 제5조, 제22조), 위원의 위촉·해촉 권한이 교육장에게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내 다른 소위원회의 학교폭력 사건 역시 수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변호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질문  
97**어떤 경우에 심의위원 해임/해촉이 가능한가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심의위원이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교육장은 직무 관련 비위 사실,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해임/해촉이 된 경우가 아닌 이상 교육장이 임의로 특정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질문  
98**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누가 임명/위촉하나요?**

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질문  
99**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의결 정족수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때, 제척이나 기피, 회피된 위원을 제외하고도 회의 종료 시까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교육장은 소위원회의 개의·의결 정족수 기준을 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출석위원은 학부모위원이 1/3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질문  
100**소위원회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산하에 두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소위원회의 개수, 위원 수\*, 개의·의결 요건, 위원장과 간사의 지명 등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교육장이 정합니다.

\* 교육장은 5인~10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때 학부모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이어야 함

질문  
101**소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누가 지명하나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교육장이 지명합니다.

교육장은 소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수 개의 소위원회에 겸임하여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장이 지정(내부결재)하는 당해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소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회 간 위원의 대행은 불가합니다.

질문  
102**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장이 지정(내부결재)하는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103**심의(소)위원회에서 사안을 병합·분리할 수 있나요?**

심의(소)위원회는 배정된 사안에 대하여 병합(예: 가해학생이 1명인 여러 건의 사안) 또는 분리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장은 내부결재를 통해, 동 사항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나 운영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104**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 의견청취는 의무인가요?**

의무입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는 특정 전문가나 의견청취 방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장(소위원장)은 사안의 경중과 내용, 피해학생 측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누구로 할지, 어떤 방법(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할지 결정(내부결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안내 P.27 참조

질문  
105**전문가로부터의 의견청취가 의무인 경우는?**

①(상담·치료 등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전문가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경우 ②상담·치료 등을 받은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관련학생 모두에게 의견청취 기회 부여  
(각각 다른 전문가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함)

질문  
106

### 전문가 의견청취 제도의 운영 절차는?

1. 교육지원청: 피해학생 측에게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 송부  
-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 의사 확인서 첨부
2. 피해학생 측: 교육지원청에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 의사 확인서 제출  
- 상담·치료 등을 받고 해당 전문가의 의견서\* 제출 가능
3. 교육지원청: 전문가\*\*, 의견청취 방법 결정한 후 피해학생 측에게 지정된 전문가와 의견청취 방법 안내
4. 피해학생 측: 전문가와 면담·진단 등을 진행
5. 전문가: 심의위원회에 출석 또는 의견서 제출
6.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청취(의견에 구속되지 않음)

\* 진단서, 소견서, 진료·치료·상담 확인서 등 포함

\*\* 교육지원청 전문가 인력풀에서 심의(소)위원장이 지정



단계	내용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 제도 안내	<b>심의위원회 → 피해학생 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발송 시 전문가 의견청취 제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학생 측 참석안내서에만 포함</li> <li>- 피해학생 측의 요청 확인서 제출은 심의위원회 개최 0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li> </ul> </li> <li>※ 피해학생 측 의사확인서 제출 기한은 교육지원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피해학생 측 권리 최대 보장</li> <li>※ 피해학생 측 요청이 없더라도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전문가 의견청취 가능</li> </ul>
↓	↓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 의사 서면 제출	<b>피해학생 측 → 심의위원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 의사 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방법: 팩스, 우편, 인편 등의 방법 활용</li> </ul> </li> </ul>
↓	↓
심의위원회 접수	<b>심의위원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 상황을 심의(소)위원회에 보고(요청 의사 확인서 첨부)</li> </ul> </li> <li>◦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와 의견청취 방법(출석 또는 서면) 결정(내부결재)</li> <li>※ 심의(소)위원장은 사안의 경중, 피해학생 의사 등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가를 누구로 할지와 의견청취 방법을 결정</li> </ul> </li> <li>◦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학생 측에게 해당 전문가 및 의견청취 방법 안내</li> <li>-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방법(출석 또는 서면) 안내</li> </ul> </li> </ul>
↓	↓
전문가로부터의 면담 및 진단	<b>피해학생 측 → 전문가 → 심의위원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학생 : ①, ② 방법 중에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여 안내한 전문가와 면담·진단 등 진행</li> <li>- ② 개별적으로 별도의 전문가와 상담·치료 등을 받아 의견서 제출</li> </ul> </li> <li>◦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의 경우: 학생 면담·진단 진행 후 의견서 제출 또는 심의위원회 출석 가능</li> <li>- ②의 경우: 학생 상담·치료 후 의견서 제출 또는 심의위원회 출석 가능</li> <li>※ 단, 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함</li> </ul> </li> </ul>
↓	↓
소위원회 개최 및 전문가 의견 청취	<b>심의위원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위원장: 소위원회 개최 직후 전문가 의견 청취 관련 위원들 동의 확인</li> <li>◦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li> </ul>

질문  
107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에는 누가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의사나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는 심리상담사, 심리치료사, 발달심리 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교)사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Wee)클래스 또는 위(Wee)센터에 소속된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그 밖에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아동심리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청취도 가능합니다.

질문  
108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경우, 전문상담(교)사로부터 의견청취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은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로부터 상담을 진행한 후, 해당 전문상담(교)사에게 의견서 작성이나 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가 작성한 의견서가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상담(교)사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109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은?**

전문가 의견청취 제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폭력 사안의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법률 개정이유, 법제처 발췌)’. 따라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을 공유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상담·치료 등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면담·진단 등을 통하여 분석한 피해학생의 심리상태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심의과정에 참고하는 것입니다.

\* 심의위원회는 전문가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

질문  
110**전문가 의견청취 시 관련 수당의 지급은 가능한가요?**

심의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  
111**심의위원회 당일까지 전문가 의견청취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는?**

피해학생 측이 전문가 의견청취를 요청했는데, 심의위원회 당일까지 전문가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전문가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해야 합니다.

질문  
112**소위원회 심의·의결 후 처리절차는?**

심의위원회는 조치 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조치 결정하도록 요청합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반영하여 조치 결정(교육장 내부결재 시 심의(소)위원회 의결서와 조치결정 통보서를 첨부, 내부 결재 후 조치결정 통보서 송부)합니다.

심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위원회 심의결과(소위원회 의결서 등)는 분기별/학기별(교육장이 정함)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질문  
113**소위원회를 추가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교육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추가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  
114

### 공동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 구성이 되나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교육지원청은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공문 발송)해야 합니다.

질문  
115

### 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일반적인 심의위원회 구성과 유사합니다.

관련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들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은 10인 이상 50인 이하, 학부모위원은 1/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각각 지명하며,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 및 학부모위원 수는 가급적 동일하게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각 교육지원청은 공동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부결재를 해둘 필요가 있음



질문  
116

## 공동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은?

단계	처리내용
교육지원청간 사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교육지원청, 개최 일시·장소 선정</li> <li>• 위원 구성, 위원장 및 간사 지명</li> <li>• 심의·의결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교환 방법</li> <li>• 참석 안내서, 개최통지 공문 발송 방법</li> <li>• 심의위원회 진행을 위한 인력 지원</li> <li>* 공동심의위원회 구성 내부결재 후 보고(도교육청으로 공문발송)</li> <li>• 주관 교육지원청에서 협조 교육지원청으로 안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사안개요(신고 내용) 등) 제공</li> </ul>
공동심의위원 회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개최통지</li> <li>* 각각의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명의로 안내통지서 발송</li> <li>• 심의위원회 조치 의결</li> <li>• 의결서, 회의록 및 조치결정 통보서 작성 후 내부결재</li> <li>• 관련 교육지원청에 의결서, 회의록 및 조치결정 통보서를 송부</li> <li>* 관할지역 학생의 조치결정 통보서는 내부결재, 타지역 학생의 조치결정 통보서 (교육장 칸 공란)는 관련 교육지원청으로 발송</li> </ul>
조치결정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교육지원청은 의결서, 회의록 및 조치결정 통보서 내부결재</li> <li>* 관련 교육지원청에서는 소속 교육장의 내부결재일을 조치결정일로 함</li> <li>• 관련 교육지원청은 관할지역 학생 측에게 조치결정 통보(교육장명의로)</li> <li>※ 회의록 공개 요청시 학생이 소속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서 공개</li> </ul>
학교장 조치이행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에게 공문을 통해 조치결정을 통보, 조치이행 협조 요청</li> </ul>

질문  
117

## 관련학생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처리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피·가해학생이 의견진술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A decorative grid of 24 small, light-brown dots arranged in 8 rows and 3 column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07

---

**심의위원의  
제척·기파·회피**

## 7

##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관련법령

## 시행령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질문  
118

### 제척, 기피, 회피란 무엇인가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특정 심의위원을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제척’이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바로 배제,  
‘기피’란 분쟁당사자가 배제를 신청하여 의결로써 배제,  
‘회피’는 심의위원이 스스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위와 같이 전담  
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음

질문  
119

### 제척이 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 심의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그 밖에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질문  
120

### 기피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기피신청서 양식 활용).

피·가해학생 보호자는 ‘A위원이 \*\*\*한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도 가능하고, 회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질문  
121**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피신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사건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A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기피신청 대상이 된 A위원은 기피여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기피신청 대상이 된 A위원과 기피신청을 한 분쟁당사자는 회의실에서 퇴실하여야 합니다.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질문  
122**제척, 기피, 회피 해당자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진행이 가능한가요?**

제척된 위원, 기피 결정된 위원, 회피 위원을 제외하고도 회의 종료 시까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인의 재적위원 중 5인이 참석했더라도 1인이 제척되었다면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  
123**어떤 경우에 회피를 해야 하나요?**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사건의 피·가해학생의 보호자인(보호자였던) 경우 △심의위원이 해당사건의 피·가해학생과 친족인(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심의위원이 해당사건의 피·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A decorative grid of small dots arranged in 10 rows and 3 column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08

---

**심의위원회의  
비공개, 정보공개**

## 8

## 심의위원회의 비공개, 정보공개

## 관련법령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질문  
124

### 교육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나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관련학생 및 보호자, 심의위원, 간사, 참고인을 제외하고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장이라 하더라도 비공개회의인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거나 참관할 수 없습니다.

질문  
125

### 변호사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나요?

심위원회에서 참석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통해 법률대리인으로 확인된 변호사의 참석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당학생에 대한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시간'에만 참석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 당일 신분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시 사전에 소속 지방 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하므로 ('변호사법」 제29조), 경유증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급박한 사정으로 경유증표를 미부착한 경우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속 지방 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질문  
126

### 변호사가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의 참석여부와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에서 발언권의 부여 여부와 부여 정도를 결정합니다.

질문  
127**교원이나 전문가를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화상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해당학교 교원이나 전문가(변호사, 의사, 경찰관 등)는 참고인의 형태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므로,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질문  
128**비밀누설금지 의무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무입니다.

질문  
129**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비밀누설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피·가해학생 및 가족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피·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분쟁당사자 간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비밀 또는 피·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  
130**관련학생들 및 그 보호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부여되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심의위원회 위원, 전담기구나 소속교원,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가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누설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관계법령(「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131**심의위원회 속기록, 녹음기록, 녹취록을 생산·보존할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녹취록을 생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존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다만, 교육장이 심의위원회 녹음기록 등을 업무관련 증빙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에 해당함

질문  
132**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생산·보존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의결사항(기피여부, 학교폭력 해당 여부, 긴급조치 추진, 피·가해학생 조치,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부가된 특별교육) 등이 기록된 회의록이 작성·보존되어야 합니다.

질문  
133

##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방법은?

발언한 내용의 전부가 아닌 발언요지 기재로 충분합니다.  
다만, 피·가해학생 측의 주요 진술이 통째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134

##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범위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들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이때 ‘개인정보’의 범위는 시행령 제33조 ‘비밀’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질문  
135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미산입)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직접 방문 청구: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질문  
136

## 공개가 가능한 정보, 불가능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의위원회 회의록(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외), 본인의 자녀가 작성한 확인서는 피·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 시 공개(열람,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면담일지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닌 한 심의위원회 회의의 녹음기록과 녹취록은 '정보부존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137

## 현장이 찍힌 CCTV영상을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공개할 수 있나요?

CCTV 녹화영상에 다른 학생들의 모습이 찍혀 있다면 공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개인정보)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다만, 제6호 다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합니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재판부에서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 가능함

질문  
138

##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즉,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학교는 학교장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이 가능합니다.

\*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

질문  
139

## 전담기구 구성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나요?

학교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제5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제6호)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제6호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에 제6호 다목과 라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질문  
140

##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나요?

교육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제5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제6호)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경우라도 분쟁당사자의 기피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교원이나 학부모위원인 경우 소속학교명 등)는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141

##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①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이의신청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관련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한 경우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서, 위 ①과 ②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142**정보공개심의회 설치가 의무인가요?**

교육지원청은 의무이나, 학교는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경우에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이라 하더라도 학교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143**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사본, 전자적 형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으로 공개합니다.

정보의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데,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상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즉, 학교나 교육지원청은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습니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의록을 위·변조할 수 없도록(ex. 사본을 스캔) 공개해야 합니다.

\* 예외: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질문  
144**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정보공개 청구를 관련학생의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특정인에게만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고, 해당 정보가 최종적으로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등에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하면 회의록에 대한 정당한 청구인(피·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이 확인된다면 정보공개 청구 자체도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  
145

##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의 불복 구제 절차는?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 이의신청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신청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 2. 행정심판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 3. 행정소송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질문  
146

## 수사기관에서 자료제출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이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에 근거하여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제출이나 개인정보 제공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교육장은 사안의 성격, 요청한 자료의 종류, 분쟁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료제출이나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관 간 업무협조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님  
(개별 근거법령에 따라 제출 여부를 결정)

A decorative grid of 24 small dots arranged in 8 rows and 3 column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09

---

## 피해학생 보호조치

## 9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관련법령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질문  
147**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반드시 내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릴 수 있습니다.

질문  
148**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동시에 부과(병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병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  
149**피해학생 보호자가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릴 수 있지만,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이행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150**보호조치로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내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상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제73조제6항, 제89조제5항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환경 변경 전학'(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하고, 관할 교육장은 동 의견서를 검토한 후 전학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성폭력'의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전학을 원한다면,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전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

질문  
151**피해학생의 결석에 대한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제16조제1항의 보호조치를 받고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장은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피해학생 측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152**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 이전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장은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등)를 피해학생 측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153**피해학생의 심리상담비용이나 치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학생이 제16조제1항의 보호조치를 받고 △조치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선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교안전공제회는 선지급한 비용에 대해 가해학생 측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154

##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모두 지원해주나요?

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제1호(심리상담 및 조언)와 제2호(일시보호) 조치의 경우 교육감 지정기관\*에서 받은 비용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1호의 경우 교육감 지정기관에서 받은 '상담'비용으로 제한되고, 입원·약제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게 교육감 지정 기관과 지원범위를 사전에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에서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합니다.

\*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기관, 일시보호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생활인성교육과-과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1년 단위로 지정되므로, 매해 지정기관을 확인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2024

#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



A decorative grid of 24 small dots arranged in 8 rows and 3 column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10

---

## 가해학생 선도조치

## 10

## 가해학생 선도조치

## 관련법령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④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질문  
155**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 가해학생 선도조치는 반드시 내려야 하나요?**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 선도 조치는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아님”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경우에는 조치 결정 없이 회의를 종료합니다.

-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 => “학교폭력 아님” 결정
- 가해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 “증거불충분” 결정
- 가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혐의없음” 결정

질문  
156**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동시에 부과(병과)할 수 있나요?**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동시에 부과(병과)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57**(기본·부가적) 판단요소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요소	고려할 사항(예시)
심각성	성폭력인지 여부, 폭행·상해의 정도, 진단서 제출여부, 2인 이상의 집단폭력인지, 피해학생의 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폭력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등
지속성	전담기구 심의결과, 해당 학교폭력이 지속된 기간 및 횟수 등
고의성	이전에 피해학생과 마찰이 있었는지, 비슷한 행동을 행한 적이 있는지, 폭력이 발생한 장소에 모이게 된 이유, 만류가 있음에도 행사한 것인지, 교사의 지도가 있음에도 그렇게 행동했는지, 비난받을 행동임을 알고 있는지 등
반성 정도	조사관의 사안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심의위원회 참석 태도, 확인된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
화해 정도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화해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합의서가 제출되었는지, 고소·고발 여부,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갈등조정 및 화해중재 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등
선도 가능성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평소의 생활 태도, 사안접수 이후의 태도 변화, 등
장애여부	장애유형(영역) 및 정도 등

질문  
158**가해학생 조치를 내릴 때 기간의 단위는?**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및 부가된 특별교육(또는 심리치료)은 '시간'단위로,  
제6호(출석정지) 조치는 '일'단위로 내립니다.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조치도 기간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학교급의 졸업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질문  
159**‘조치이행기간’을 정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이행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학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조치는 조치의 기간 및 그 이행기간이 동일함

질문  
160**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만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나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단독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질문  
161**제1호(서면사과) 조치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제1호 조치만 내려진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 및 제13항에 따른 부가된 특별교육은 없습니다.
- 제1호 조치는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5항에 따른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이후에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거나, 당해 제1호 조치를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질문  
162**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조치에서 ‘접촉금지’의 범위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해학생의 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2호 조치로 가해학생을 출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반으로 교체를 시키거나 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이때의 ‘접촉’에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질문  
163**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조치는 언제 이행하나요?**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학생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 방과 후나 휴일 등을 활용하여 학교에서의 봉사와 사회봉사 조치\*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질문  
164**제5호(특별교육이수) 조치에 따른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외부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특별교육 이수기관(외부기관)에서 이수가 어려울 경우 단위학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모든 초·중·고, 특수 및 각종학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외부기관은 1년 단위로 지정되므로, 매해 지정기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조치 결정기구	관련 법령 및 조치내용	이수 가능한 기관	
		Wee센터 등 학교 밖 기관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	○ 단, 부득이하게 외부기관(특별교육 이수기관 등)에서 이수가 어려울 경우

질문  
165**제5호(심리치료) 조치는 어디에서 받나요?**

제5호(심리치료) 조치는 병·의원 등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비용 발생 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질문  
166**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에 따른 결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이유로 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167**제6호(출석정지) 조치 기간의 출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출석정지 기간 중 등교하여 특별교육을 받는다거나 위(Wee)클래스에서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석 또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  
168**제6호(출석정지) 조치 기간에 부가된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나요?**

출석정지 기간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정지 기간이므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질문  
169

### 제6호(출석정지) 조치의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만 가능하나, 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적절한 일수의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질문  
170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 상급학교 분리배정이 되나요?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은 제8호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다만,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장인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성화고·특목고)는 교육감이 분리 배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적절한 진로진학 지도가 필요합니다.

질문  
171

### 제1호~제7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 상급학교 분리배정이 되나요?

법령상 분리배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지원)청 배정업무 지침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교에 배정되었을 경우, 피해학생의 희망에 의해 타교로의 재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172**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추가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2호~제9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차원에서의 가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조치이행 독려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 다른 조치와는 달리 제2호 조치 미이행(위반)은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처리함

질문  
173**가해학생 조치 미이행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받고 3개월 이내에 미이행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합니다.
- (제2호 조치 위반의 경우) 학교장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사안처리 합니다.
- (제3호~제9호 조치 미이행의 경우) 교육장(심의위원회)은 학교장의 보고를 받은 21일 이내에 해당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조치(법 제17조제1항제1호 조치 제외)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과 미이행시 거부·기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보고)	(안내)
학교장 → 교육장(심의위원회)	교육장(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 미이행 가해학생 명단 보고	• 1개월 이내 이행 서면 안내

질문  
174**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①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가해학생이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로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을 징계하지 않은 경우 ③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조사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175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작성 및 발송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기재해야 하는 내용: 조치결정 이유, 조치사항, 불복절차
- ‘조치결정 이유’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안의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조치사항’에 추진된 가해학생 긴급조치를 포함하여, 결정된 피·가해학생 조치를 모두 기재
- 교육장 명의로 발송
-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서면 통보
- 본인의 조치와 상대방의 조치를 기재하여 통보
- 가해학생이 다수일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는 본인의 조치결정과 모든 가해학생의 조치결정을 △가해학생에게는 본인의 조치결정과 피해학생의 조치결정을 통보

질문  
176

**공동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작성 및 발송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동심의위원회는 피·가해학생이 소속된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따라서 조치결정 통보서 또한 각 교육장 명의로 작성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교육지원청(a학생, 가해)과 B교육지원청(b학생, 피해)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치를 결정한 경우 a학생에게는 A교육장 명의로, b학생에게는 B교육장 명의로 조치결정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질문  
177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전학을 갈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은 제한됩니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제8호 전학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위 제8호 전학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4

#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



# 11

##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부가된 특별교육

## 11

##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부가된 특별교육

## 관련법령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3조(과태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질문  
178

##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해 부가(附加)된 특별교육이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과 제13항에 따라 부가된 특별교육

가해학생 선도조치	부가된 특별교육		이수기관		비고
	대상	이수시간	Wee센터 등 학교 밖 기관	단위학교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교내봉사(3호)	학생	심의위원회 재량	○	○	보호자·학생 동반교육 가능
	보호자 (학부모)	4시간 이내			
사회봉사(4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학생	심의위원회 재량			
	보호자 (학부모)	5시간 이상			
특별교육 이수(5호)	보호자 (학부모)	5시간 이상			

※ 가해학생에게는 필요시 특별교육이 아닌 심리치료를 부가할 수 있음

※ 보호자의 부가된 특별교육 이수시간은 가장 중한 조치를 기준으로 결정함  
(ex. 제2호와 제6호 조치를 받은 경우, 제6호 조치를 기준으로 5시간 이상으로 정함)

질문  
179

## 제5호(특별교육이수) 조치와 제2호~제4호, 제6호~제8호 조치를 동시에 내리는 경우, 가해학생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부가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제5호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이외에, 제2호~제4호, 제6호~제8호 조치를 받게 되면 부가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중에서 하나를 내리고, 그 기간을 정합니다.

질문  
180**가해학생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부가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가해학생이 제1호(서면사과),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9호(퇴학처분) 조치만 단독·동시에 부과(병과)하여 받는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가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는 받지 않습니다.

질문  
181**제17조제3항에 따른 부가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받은 제17조제1항 각호의 조치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제17조제3항에 따른 부가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역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질문  
182**가해학생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제5호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부가된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에 해당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183**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1호(서면사과), 제5호(심리치료), 제9호(퇴학처분) 조치만 단독·동시에 부과(병과)하여 받는 경우, 가해학생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과 부가된 특별교육을 모두 받지 않으므로 보호자 또한 특별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  
184

###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 안내는 누가 하나요?

학교장이 안내합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후 14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부가된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조치결정 통보서)으로 통보하고,

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야 합니다.

질문  
185

###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가해학생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해당 보호자의 명단을 교육청(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양식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생활인성교육과 과별자료실에서 확인

※ 가해학생이 부가된 특별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음(심의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조치×, 과태료×).

질문  
186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교육감이 부과합니다.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  
187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절차는?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4일 이내에 동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위 기간 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예고 통보를 합니다. 예고 통보 후 14일 이내에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불응한 타당한 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개시합니다.

질문  
188

### 심의위원회에서 부가된 특별교육을 누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하여 누락된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이 경우, 조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 성격의 심의위원회로 볼 수 없습니다.



A decorative grid of 24 small, light-brown dots arranged in 8 rows and 3 column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12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 12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 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내용 등.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4. ~ 5. (생략)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 ②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기재내용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6.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③ 제2항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질문  
189

###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및 삭제해야 하는 경우는?

- 제17조제1항 제1호~제3호는 이행기간 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 미기재(조건부 기재유보)  
※ 2020. 3. 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  
※ 이행기간 내 이행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 내용은 유지됨
- 제17조제1항 제4호~제9호는 즉시 기재

〈2023. 2. 28.이전 신고되어 받은 조치〉

조치	영역	삭제 시기
제1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
제2호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사이에 삭제
제3호		- 전담기구 심의 불필요
제7호		
제4호	출결상황 특기사항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5호		-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6호		
제8호	인적·학적사항	삭제대상 아님
제9호	특기사항	

〈2023. 3. 1. ~ 2024. 2. 29. 신고되어 받은 조치〉

조치	영역	삭제 시기
제1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
제2호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사이에 삭제
제3호		- 전담기구 심의 불필요
제7호		
제4호	출결상황 특기사항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5호		-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6호		
제7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8호	인적·학적사항	
제9호	특기사항	

〈2024. 3. 1.이후 신고되어 받은 조치〉

조치	영역	삭제 시기
제1호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 졸업과 동시
제2호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사이에 삭제
제3호		- 전담기구 심의 불필요
제4호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5호		-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6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제7호		-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8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심의요건 대상자에 해당함.

질문  
190**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에 조치 결정일자와 함께 입력합니다.

ex) 2024. O. O.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

※ 조치 결정일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하여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 결재일)을 의미함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의 조치 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음

질문  
191**가해학생 조치(제1호~제3호)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1호~제3호 조치를 받은 해당 학생이 이행기간 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호~제3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제17조제1항 제1호~제9호 조치를 받은 경우로,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법률 제17조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즉, A학생이 제1호~제3호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며, A학생이 추후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에 유보된 조치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  
192**기재가 유보된 조치(제1호~제3호)와 추후 새롭게 추가된 조치(제1호~제9호)를 받은 학년도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모든 조치사항을 추가 조치된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병기하여 기재하되, 조치 결정된 일자는 각각 입력합니다.



질문  
193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동시에 부과(병과)받았다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조치별로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즉, 수 개의 가해학생 조치가 동시에 부과(병과)된 경우에 그 병과된 각각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 조치는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이후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제외). 제6호 조치는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학교생활기록부에 즉시 조치사항을 기재합니다.

질문  
194

**가해학생이 제1호~제3호 조치를 받고,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유보되나요?**

집행정신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받고,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질문  
195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의 관리·보유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적이 변동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조건부 유보 대장 포함)은 전입한 학교에서 관리·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학적 변동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조건부 유보 대장 포함)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196

**가해학생이 제1호~제3호 조치를 받고,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된 후, 본안이 기각재결(판결)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되나요?**

※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결정 후에 행정심판이 기각 재결된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 결정 당시 남은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결정 후에 행정소송 청구가 기각된 경우, 집행정지효력은 집행정지 결정문에 기재된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즉, 집행정지 결정문에 ‘~집행을~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 ‘~집행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등 기재된 시점까지 집행정지 효력은 유효하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끝난 이후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당시 남은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문  
197

**학업중단자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언제 삭제하나요?**

학업중단자는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삭제시기를 결정합니다.  
(신고시기에 따라 삭제하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삭제 불가능)

ex) 2024. 3. 1.이후 신고되어 받은 조치

제1호, 제2호, 제3호는 졸업할 시점에 당해 학년도 졸업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삭제하고, 제4호, 제5호는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절차에 따라 삭제하고, 제6호, 제7호, 제8호는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4년 후에 절차에 따라 삭제합니다.

# 13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13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 제17조의2(행정심판)

-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 제17조의3(행정소송)

-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교육장은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 제17조의4(집행정지)

-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행정심판법

###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 ④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 ⑦ 제4항과 제5항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0조(집행정지)

-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행정소송법****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소기간)**

-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3조(집행정지)**

-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질문  
198

### 학교폭력 불복절차의 개관은?

피해학생은 본인이 받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이 받은 선도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은 본인이 받은 선도조치에 대하여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199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 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리기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	관할법원 (ex.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심리대상	위법 또는 부당(합목적성 심사)한 처분	위법한 처분
처분의 변경	가능	불가
제기기간	취소심판: 안날 90일, 있은날 180일	취소소송: 안날 90일, 있은날 1년
	※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 불가능	
심리절차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구술심리

질문  
200

### 쌍방폭력으로 A, B학생 모두 피·가해학생 조치가 나온 경우의 불복방법은?

A, B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면서 피해학생입니다.

따라서 A학생은 본인이 받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조치와 B학생이 받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학생도 본인이 받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조치와 A학생이 받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01**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조치의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청구기간,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  
202**사립학교 재학생의 경우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것이고, 교육장은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질문  
203**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시 가해학생 조치의 실행이 유보되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여 가해학생 조치의 실행이 유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삭제하지 않음

질문  
204**새로운 증거자료가 나온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할 수 있나요?**

재심의를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통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학생 측에서 사안처리의 부적절, 절차적 위법 등을 이유로 심의위원회 재개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205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지체없이 처분의 상대방인 가해학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4항」). 이때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합니다. 이는 조치를 받은 당사자인 가해학생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가해학생에게 심판청구서 사본을 송달한 이후에는 동 사본을 송부한 사실을 지체없이 피해학생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방법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해당 심판청구에 심판참가를 할 수 있음

※ 교육장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가해학생에게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제3항)

※ 교육장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학교장에게 알려야 함(특히, 집행정지 신청과 그 결정이 있는 경우)

질문  
206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이 나온 경우,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교육장은 재결서의 등본을 가해학생 측에게 보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교육장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인 가해학생에게 송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행정심판법」 제48조제4항).

다만, 가해학생이 참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가해학생 측에게 직접 송달합니다.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해당 심판에 심판참가를 할 수 있음

질문  
207**가해학생이 본인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한 경우,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해관계자인 피해학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청구(제기)했다는 사실(집행정지 신청 포함)과 심판(소송)참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안내(서면, 문자, 전화 등)하여 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3항).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취지로 조치가 취소되는 경우, 피해학생은 보호조치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을 가해학생 측이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해당 심판(소송)에 심판(소송)참가를 할 수 있음

※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본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학교장에게 알려야 함(특히, 집행정지 신청과 그 결정이 있는 경우)

질문  
208**가해학생이 본인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원조치에 대해 통보를 받았던 피해학생은 해당사안의 이해관계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조치가 재결로써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교육지원청은 지체없이 그 조치가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피해학생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6항).

※ 법률상 의무는 아니나,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원조치가 취소된 경우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임

질문  
209

### 행정심판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1. 청구인(피·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2. 행정법무담당관 → 교육장 : 행정심판 청구 알림 공문 시행
3. 피청구인(교육장)의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

청구 내용 확인		답변서, 사건자료 제출
피청구인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및 사건자료 제출알림」 공문 확인	⇒ ① 답변서 등 작성 제출 ② 사건자료 편철 제출 ※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 및 사건 자료 제출알림」 공문 안내사항 참고
	(행정심판 처분청 시스템) 청구서 및 신청서 내용 확인	

4. 행정법무담당관 → 청구인(피·가해학생) : 답변서 부분 송부
5. 행정법무담당관 → 청구인, 피청구인 : 심리기일 통지
6. 행정법무담당관 → 청구인, 피청구인 : 재결서 송부



##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처리 절차

가해학생 심판청구 (가해조치 처분 취소)		피해학생 심판청구 (제3자 청구)	비고
본안	집행정지		
사건접수<접수공문>	집행정지 신청확인 <접수공문-비고란 확인>	사건접수<접수공문>	행정심판 처분청 시스템 ( <a href="http://goe.simpan.go.kr">http://goe.simpan.go.kr</a> ) 기관ID, PW
피해학생 안내 (청구사실 안내)	해당학교 안내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고, 조치를 미이행 경우에 한하여 학생부 기재 유보됨)	가해학생 측에 청구서 송달 및 심판 참가 안내 (관련학생 개인정보 주의)	유선 안내
답변서 내부결재 (관련학생 개인정보 주의)		피해학생(청구인) 측에 안내 : 가해학생 측에 청구서 송달 및 심판참가 안내한 사실 고지	등기발송 (청구서 사본 송달)
사건개요서 공문발송	증빙자료 공문발송	답변서 내부결재 (관련학생 개인정보 주의)	행정심판 처분청 시스템에 답변서 탑재
재결서 확인	집행정지 결과 확인	사건개요서 공문발송	<수신처>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업무포털)
	집행정지 결정 학교 안내	재결서 확인	공문접수 후 시스템 확인 or (등기수신 후, 비전자문서 등록)
학교 안내- 재결 결과 안내(기각) 재결 결과 안내(인용)		가해학생에게 재결서 송달 (참가시, 위원회에서 송달)	- 학교: 공문 발송 - 미참가 가해학생 : 재결서 등본 등기 발송
		학교 안내- 재결 결과 안내(기각) 재결 결과 안내(인용)	<수신처> 해당학교

질문  
210

### 행정소송 집행정지 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순서	업무내용	수신처
① 신청서 접수	신청인·피신청인 적격여부, 신청취지 등 확인	
↓		
② 전언 보고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 행정소송 담당자	경기도교육청
↓		
③ 전자소송 가입	1. “소송수행자”로 가입 2.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소송수행자) 심문기일 참석		
↓		
④ 소송사무보고	소송사무(접수·진행)보고	법무부 행정소송과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 생활인성교육과)
↓		
⑤ 법원 결정	(기각결정) 소송사무결과보고 → 소송사무종결보고  (인용결정) 즉시항고여부 지휘 요청 • “포기 지휘” → 소송결과보고 • “제기 지휘” → 항고장 제출	내부기안  ↓ 법무부 행정소송과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 생활인성교육과)

\* 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부서 포함

※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 소송업무 → 자료실 → 「각급기관 행정소송 실무 매뉴얼(2023. 8.)」 참고

질문  
211

## 행정소송 업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순서	업무내용	수신처
① 소장 접수	원고·피고 적격여부, 청구취지 등 확인	
② 전언 보고	행정법무담당관 행정소송 담당자	경기도교육청
③ 응소계획 수립 및 사건 의뢰	1. 소속직원 소송수행자 지정(3명 이내) 2. 고문변호사 중 소송대리인 선임	① 응소계획 내부결재 ② 변호사에게 사건의뢰 공문 발송
④ 전자소송 가입	1. “소송수행자”로 가입 2.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⑤ 소송사무보고 (3일 이내)	1. 소송사무접수보고 2. 소송사무진행보고 • 변론기일 법원 출석 후 진술내용 및 진행상황 등 보고	법무부 행정소송과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 생활인성교육과*)
⑥ 판결 선고 (5일 이내)	(승소) 소송사무결과보고  (패소) 상소여부(포기/제기) 지휘 요청 • “포기 지휘” → 소송종결보고 • “제기 지휘” → 항소(상고)장 제출 → ③번 처리절차부터 진행	법무부 행정소송과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 생활인성교육과*)
⑦ 소송 종결	사건 종결보고(내부결재)  소송사무종결보고  (승소) 소송비용액 회수  (패소)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 보고	내부기안 ↓ 법무부 행정소송과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 생활인성교육과*)  원고 감사관, 행정법무담당관

\* 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부서 포함

※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 소송업무 → 자료실 → 「각급기관 행정소송 실무 매뉴얼(2023. 8.)」  
참고

질문  
212

**행정심판(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은, 교육장의 조치가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장은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공문) 미이행된 가해학생 조치를 집행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  
213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치를 변경하는 재결을 한 경우, 교육장에 의한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조치가 변경됩니다. 즉,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장은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공문) 변경된 가해학생 조치를 이행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  
214

**행정심판(소송)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취소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①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조치가 취소된 경우라면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②조치가 과하다는 이유로 조치가 취소된 경우라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감된 조치로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③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취지로 조치가 취소된 경우라면 별도의 절차(심의위원회를 개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 ①~③ 모두 교육장은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후속 조치(ex.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정정) 및 삭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보다 높은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함

질문  
215

**가해학생이 본인 조치(원조치)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원조치가 변경된 경우, 이미 원조치 결정을 이행하였더라도 변경된 조치 결정을 다시 이행해야 하나요?**

변경된 조치 결정을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ex) 원조치 결정(제4호 사회봉사) → 변경된 조치 결정(제3호 학교봉사)

가해학생이 원조치 결정인 사회봉사를 이미 이행하였더라도 변경된 조치 결정인 학교봉사를 다시 이행하여야 함.







## 참고자료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경기도교육청, 2024)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4)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교육부, 2024)
- 생활인성교육과 업무 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24)

※ 법령 및 판례의 열람 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Memo



Memo

2024

## 학교폭력 사안처리

## Q&A 자료집



### 만든 사람들

**자문**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과장)  
조용주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관)

**집필** 박성미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변호사)

**검토** 송은애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  
이정은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  
유지영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  
황수현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  
백창호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변호사)



배부일 | 2024.07.

본 자료집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